

강기정 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의미있는 첫걸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 동안 씬 없이 달려온 지금, 참으로 기쁘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다만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안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많은 기관 유치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공청회, 행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임시회가 열리는 2월 광주시의회에 공식 의견 청취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 의결 전까지 시민과 시의

제정 특례조항·정부 부처 이전 포함 안돼 아쉬워
국회 심의과정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2월 시의회에 공식 의견 청취 전달...빠른 협조 요청

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토 남북권 거점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지방정부가 신설된다.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관련 준비를 거쳐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 서구, '뽕겨요' 주문하면 2500원 할인쿠폰 최대 20% 할인 효과로 외식비 부담 완화·골목상권 활성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서구는 오는 2월부터 공공배달앱 '뽕겨요'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2500원 할인쿠폰을 하루 500매씩 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쿠폰은 2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1인당 2만원 이상 주문 시 25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제공되는 10% 선할인에 더해 할인쿠폰 혜택까지 적용받을 경우 최대 2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당 쿠폰은 '뽕겨요' 입점업체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서구는 이번 사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서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배달 중

개수수로 부담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한은행 뽕겨요 사업단과 '광주 서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뽕겨요'는 민간 배달앱 대비 중개수수료가 약 2%대로 낮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협력형 공공배달 플랫폼이다. 사업운영과 할인쿠폰 발행·관리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담당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소비지원 사업은 공공정책과 민간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은 살리는 상생경제 모델의 좋은 사례”라며 “착한 소비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성 경비를 대폭 절감해 지난 9월부터 4월 2일까지 12주간 14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페이백(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합평군 공고 제2026 - 99 호

합평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합평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합 평 군 수

1.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정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종류	구분	폭원							
기정	소로	3	76	4-8	95	월야면 월야리 중로 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 3-902	월야면 도로	-	제1800-15호(1800.2.19)
변경	중로	3	A	12	95	월야면 월야리 중로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3-902	월야면 도로	-	제1800-15호(1800.2.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3-76	중로 3-A	□ 폭원 및 진행변경 - 기정 : B = 4-8m, L = 95m - 변경 : B = 12m, L = 95m	□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로 폭원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1. 27. ~ 2025. 2. 9.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합평군청 본청3층 지역개발과

다. 관계소재 : 계재생략(합평군청 지역개발과, 월야면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지역개발과 (061-320-1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청소년 AI 체험·코딩스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체험·특강 등 분야별 AI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구, '청소년 AI·코딩스쿨' 올해 첫선

취약계층 청소년 1천여 명 대상... 디지털 격차 완화 목적

세부 과정은 ▲AI 코딩스쿨 ▲미래체험 AI 스쿨 ▲명사 초청 AI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AI 코딩스쿨'은 대학 교수와 AI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의 주도하에 청소년들

이 프로그래밍 로봇 등을 직접 코딩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실습형 교육이다. 오는 10월까지 총 15회차 진행되며 회당 8시간의 강의를 제공한다.

'미래체험 AI 스쿨'은 국립광주과학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북구 지역아동센터 109개소의 아동 370여 명에게 AI 관련 직

업을 탐구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교육을 총 24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명사 초청 AI 아카데미'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된다. 강사 섭외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주제의 특강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북구는 오는 11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내년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민감한 현안 수두룩, 풀어야 할 과제는

매가 이벤트다 보니 풀어야 할 속제도 적지 않다. 특히 '판도라 상자'인 주(主) 청사 문제부터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사회 반발, 학교 불균형 우려, 통합 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은 예민하고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분야다.

속도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론화 미흡과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행정 비효율,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노동권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도 후속 공청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은) 설 연휴 전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가능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정

부 측과 추가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다.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2월 국회 통과→6월 초대 특별시장 선출→7월 공식 출범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입법 공청회,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다음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상임위, 2월 말 안에 본회

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선행 절차 중 하나인 시·도의회 동의는 2월 임시회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인구 320만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기동취재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